



독도를 지키려는

독도소식지 제25호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발행일 : 2016년 9월 19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로263 (괴정동)
TEL:051-466-8761, FAX:051-206-8761
ds5ean@naver.com
H·P : 010-6504-6510

제25호 발행자 편집자: 이상훈 /부산광역시동래구중앙대로1301번길12, A동203호 (온천3동.부원A) /신고번호: 동래 바00001/신고일 2012.05.18./ 인쇄(주)동아인업 (051)807-0600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답을 생각하고 3면에 독도소식지 25호를 내면서

독도소식지는 일본의 독도침략을 막으려는 일념에서 피 같은 돈으로 만든 것입니다.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전달하십시오. 독도를 우리 모두 목숨 걸고 지켜야합니다. 독도소식지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독도소식지 창간호부터 전부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방파제착공촉구를 위한 『100만인서명』에 적극 참여하자



윤형덕
(홍사단독도수호
본부상임대표)

홍사단독도수호본부에서는 지난 4월 25일『독도방파제착공촉구를 위한 100만인서명』출범식을 갖고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독도방파제 구축은 이미 정부에서 입안 된 사항이고, 예산 또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실효적 지배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일본의 작금의 계략을 볼 때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은 2017년 국회통과를 목표로 소위 “EEZ 권익보호 신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법안은 인근 수역을 훼손 할 수 있는 UN 해양법상 위험한 법안이다. 이러한 우리 주변의 변화를 보면서 안이한 방위 태세는 영토주권 수호 차원에서 엄청난 우를 범하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영토주권을 더욱 확고히 하여 외부 세력의 야욕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영토 주권행사를 통해 당당함을 보여야겠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부가 이미 기획한 독도방파제를 조속히 착공하여 독도에서의 어로행위, 독도관광객 안전 방문, 독도어민 20가구 정착, 원활한 해양 및 과학연구 사업, 굳건한 국가방위에 힘써야겠다. 연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독도를 찾는데 방문객 중 30% 이상은 심한 파랑으로 인해 선박접안을 할 수 없어 독도 상륙을 못한 채 아쉬움을 갖고 되돌아 가야했다. 또한 방파제가 구축된다면 어선들의 조업 시 안전 대피소로 활용 될 수 있고, 독도접안이 보장되어 어업 전진 기지로서 큰 역할과 해상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다. 동해 끝자락에서 여러 가지 과학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요지로 방위적 측면과 과학연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할 수 있다. 여기에 방파제 착공의 당위성이 있다. (끝)

독도사수연합회는 더 많은 것을 3면 서명운동

후원금 주신 분

| | | |
|-------|----------------|---------|
| 양지연 | 부산시남구용호2동오륙도SK | 13,000원 |
| 오상본 | 부산시진구연지자이A | 40,000원 |
| X 동 X | 부산시해운대구센텀동로 | 20,000원 |
| 손수훈 | 경남김해시삼x동 | 10,000원 |
| 김정인 | 서울시강남구성내동 | 20,000원 |

독도지키기 서명받은분 증서를 드립니다. 연락 주세요. 100명이상

http://cafe.daum.net/anadok/Aic/81
위의 주소에 명단이 있습니다.

■ 무순입니다(해운대 에서 함께 하신분)

- △주영규(연제구연산동)
- △김해영 (부산진구 전포동)
- △은 지 (김해영친구 xxxxxxxx)
- △정명욱 (동래구 명장동)
- △정지훈 (동래구 명장동)
- △오윤길 (경북구미시)
- △윤미경 (경북구미시)
- △오찬미 (경북구미시)
- △안종욱 (경남양산시웅상읍)
- △조재문 양산시 (지하철에서 함께 서명 운동)

■ 서명을 받아 보내 주신 분

- △정승복 남구대연4동
- △방순석 해운대 좌동
- △경원전문대 27대 총 학생회 3860 명
- △민영근 부산시동래구온천1동 100명
- △김삼국 부산시사하구감천1동 120명

- △전국공무원노동조합해운대구지부 448명
- △김재원 (주소없음) 253명
- △최유성 최유성 기장군기장읍 동부리 230명
- △이제혁 인천시부평구(청소년독도지킴이 1863명
- △정삼순 동구좌천동수정동성결교회집사, 115명
- △정경자 부산시중구창선동2가 108명 서명
- △전해숙 서울시중랑구면목3동 미용실 115명
- △조규석 경남창원시두대동 115명 서명
- △최연기 부산시동구수정5동 성심미용실 138명
- △이진경 울산시 북구 양정동 112명
- △박만서 경기도의정부시장안동 109명
- △이정천 대전시유성구봉명동 230명
- △강용관 부산시사하구하단2동 230명
- △윤희순 울산시중구 다운동 115명
- △서울시금천구동일여자고등학교NGO동아리180명
- △오영희 서울관악구신림12동 100명
- △민금식 경남밀양시 100명
- △전석희 부산시 동구 범일2동 240명
- △김중기 부산시해운대구반여1동 100명

(이 명단은 박물관에 영원히 보존 됩니다)

일본, 방위백서 통해 12년째 '독도는 일본땅' 도발...북한 움직임 경계

도쿄문화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입력 : 2016.08.02 10:54:01 수정 : 2016.08.02 15:37:09



▲일본 방위성이 2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 게재돼 있는 ‘우리나라(일본)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지도(286쪽).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 서도 독도 주위에 빨강색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으로 표시하고 있다. 일본은 이 지도에서 독도를 자국이 주장하는 명칭인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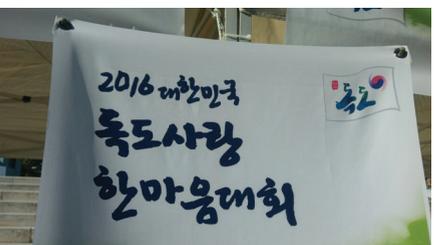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12년 연속으로 방위백서에 실었다. 일본 방위성은 2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6년 일본 방위백서 4쪽에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방위성은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 (284쪽)와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286쪽) 등의 제목으로 된 백서 내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면서 일본영토로 표기했

다. 일본은 ADIZ 지도에서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붉은색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 일본은 또 2015년과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을 넣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 때인 2005년 이후 12년째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장을 방위백서에 실고 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을 진전시킨 것은 우리나라(일본)을 포함한 지역·국제사회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움직임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백서는 이어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1960년대까지 (핵무기를 탄도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 소형화하는) 기술을 획득했고 북한이 과거 4차례 핵실험을 통해 기술적으로 성숙한 것을 볼 때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적었다. 또 지난 2월 북한이 ‘인공위성’ 명목으로 실시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대포동2과생형인 3단식 탄도 미사일이 이용된 것으로 여겨진다”며 “가령 대포동2 과생형이 탄두 중량을 약 1t 이하의 탄도 미사일 사용된다면 사정거리는 약 1만km 이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의 투명성이 결여된 군사력 증강과 적극적인 해양진출이 지역의 군사균형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이어 “(중국이)해양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기존 국제법 질서와 맞지 않는 독자적 주장을 근거로 들어 힘을 배경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등 고압적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이어 “그중에는 예측이 어려운 사태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며 “현상변경을 기정사실화해 자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하려 하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방위백서는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발효된 안보법을 22쪽에 걸쳐 다뤘다. (지면관계상 4면에)

독도사수연합회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설 준비로 독도홍보와 유인도화 서명운동을 합니다.



◆2016 대한민국 독도사랑 할마음대회 ◆ 2016. 8. 27(토) 오전 10시 독도관련 단체 & 대학 독도동아리 서울 한강 여의나루 이랜드크루즈 선착장 일원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총감독

제일 수고하신분

울릉피해지역에 자원봉사함

독도사수연합회 대구광역시지회장 박신철입니다.



독도 이상훈 회장님이 경북지회가 아직 없으니 우선 대구경북을 맡아서 일을 하고 경북지회가 생기면 대구지역에 전념 해 달라고 하셨기에 우선은 대구경북 지회를 맡아서 최선의 노력으로 독도를 지키려고 합니다. 일본은 국제 법으로 독도를 뺏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국제 법으로 유리 하려면 독도방과제를 만들어 방과제 안쪽에 매립을 좀 해서 독도 마을을 만들고 독도주민들이 관광객들에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서 살도록 만들어야 국제 법으로 유리 해 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대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하고 이것저것 험한 일도 마다 않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일 중에는 가장 큰 문제가 영토문제입니다. 독도를 지키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우리 땅 독도를 지킵시다. 힘을 모우는 방법은 독도사수연합회에 회원 가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 8. 1 박신철 배상 010-4512-5990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독도문제의 위기와 기회 10편



1978년 개정 규칙은 묵시적 동의가 관할권의 근거로 기능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막지는 않는다. 규칙 제38조 5항은 일방적으로 제소된 사건이 사건 총명부에 등재되려면 피제소 국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동의가 특정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이 규칙 자체는 피제소 국가들이 관할권에 관해서 언급함이 없이 사건의 본안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피제소 국가가 관할권에 관한 언급 없이 본안에 대한 주장을 하거나 또는 잠정조치를 요구하는 등으로 묵시적 동의의 원칙을 원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입법적 원칙에 관한 문제” 같은 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일방적인 제소의 경우에 소 제기의 사실을 공시하는 문제만 보더라도; 사건총명부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피제소 국가가 계쟁 사건의 제소를 위해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동의해야만 하는 것을 조건부로 정하고 있지만, ICJ는 총명부에 등재 되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보도자료를 발간하여 일방적 소송의 제기를 공표함으로써 확대관할권 제도를 적용하려는 시도를 공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제소를 시도하였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공시하려는 제소 국가의 기도를 실제로 막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ICJ의 사법 절차 운영에 있어서 <<국제적 분쟁 해결에 있어서 각 국가는 그 해결수단과 형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법적 전제가 훼손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적 전제는 일단의 법학자들이 강하게 주장했던 강제 관할 제도를 분명하게 거부한 1920년대의 입법적인 선택이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리고 1945년 유엔이라는

기구를 창설할 때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유사 강제관할제도」를 도입할 때, 다시 한번 더 확인되어, 강제관할제도에 관한 강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관할제도를 유지하는 원칙적 기준으로 정착된 것이다. ICJ는 1978년 이래, forum prorogatum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피제소 국가의 추후적 동의의 존재를 확인함에 있어서 점점 더 엄격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 특히 그 동의가 묵시적인 것일 경우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ICJ는 잠정적 조치를 실시하는 단계에서 본안을 심의 판결하기 위한 관할권을 성립시키는 당사국의 동의를 추정하는 것에 특별한 신중성을 보여 왔는데, 이런 엄격한 태도는 앞으로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 측의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제소 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국이 「코르푸 해협 사건」에 있어서 알바니아가 범한 것과 같은 실수(자신 없는 태도로 제소 국가 행위의 정당성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것)를 범하지만 않는다면, ICJ가 확대관할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란 없을 것이다.

(2) 계쟁사건 내용에 대한 고려사항

「코르푸 해협사건」과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회사 사건」에서는 “계쟁사건의 내용이 가지는 ‘시대적인 특성’”이나 ‘시대적인 관심사’에 이끌리는 ICJ 재판관들의 법적 관심의 경향 같은 것이 확대관할권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일본이 만일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전제로 독도의 일본 영유주장이 법적인 정당성이 유지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다음호에 계속 분회 홈페이지에서 논문 전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독도에 관심을 가집시다.>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독도주인은 주인이다. 월드컵 축구 때 서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응원을 했다. 그런데 독도는 관심이 없다. 독도행사에는 1천명도 잘 모이지 않는다. 일본이 독도를 뺏으려 하는 것을 알면서 가만있으면 독도를 버리는 것이 아닌가요?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조업 하려면 일본에 신고해야한다 세계 지도는 일본해에 “다케시마”다 바다 40% 지도는30% 종합 70%는 넘어간 셈이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o 요? x 요? 독도를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독도운동에 참여 하세요.

회원 가입부터 하세요.

<편집자>

아래 서명운동을 하는 이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힘이 있으면 정치인이 잘 하면 국민들이 독도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힘도 없고 정치인이 잘 못 하고 국민도 안 하면 나라가 잘 못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2,000만명이 서명하면 된다. 일본은 국제재판을 해서 독도를 뺏으려 한다. 국제재판을 안 하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때를 생각해서 국제재판에 이기려면 독도연구를 많이 해야 이길 수 있고 사람이 많이 살아야 이길 수 있다. 독도를 관광지 만들어 세계 각국에 한국의 관광지로 홍보하면 더욱 유리해진다. 그리고 독도의용수비대를 잘 모셔야 이기며 독도바다가 공동수역이면 재판에 더욱 불리하다. 정부가 하면 우리국민들이 서명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안 하니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론이 되면 정부는 투표 할 때 표를 의식해서 여론 따라 정책을 바꿀 것이다. 서명 많이 하면 여론이 된다. 아래 서명용지를 복사해서 서명 받아 보내주세요. 독도사수연합회

청원서

(아래 서명인은 아래 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 합니다.)

1.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3. 독도의 관광지개발을 통하여 관광수입과 함께 국내·외에 홍보해 주십시오.
4. 독도를 지킨 독도 의용수비대를 국가최고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기려주십시오.
5. 잘못 맺어진 신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여 배타적경제수역주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 순번 | 성명 | 주소 | 서명 | 비고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17 | | | | |
| 18 | | | | |
| 19 | | | | |
| 20 | | | | |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서명운동자)
 독도사수대 http://cafe.naver.com/dockoinkorea
 보낼곳 : 47825 부산광역시동래구중앙대로1301번길12, A동203호 (온천3동, 부원A)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100명이상 서명자는 증서를 드립니다. 서명받아 보내주세요.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광복절을 건국절이라니?



신용우 선생

건국절이라니?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다고 갑자기 건국절 이야기가 떠오른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건국절이 개천절이다.

2016년은 단기4349년이자 환기 9213년이다. 굳이 환기까지 들추지 않더라도 반만년 역사의 나라를 겨우 70년 역사로 만들겠다는 저의가 무언지 궁금하다. 중국이 한족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소수민족의 영토마저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통일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건국절이라는 묘한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그리도 부러웠다는 말인가? 배울 것을 배우고 닦을 것을 닦자. 고조선 이래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이 피 흘리며 찾은 조국 광복까지의 역사를 포기하지는 묘한 발상은 이제 그만 버리고 그네들의 역사 의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제발 좀 깨우쳐라. 굳이 건국절을 정하고 싶으면 개천절의 원래 날자인 음력 10월 3일을 건국절로 정하고 대대적인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쓸데없는 일로 국력 낭비하지 말고 지금 배고파 우는 저 많은 백성들의 피맺힌 울음 소리를 듣고, 올 겨울에는 배고파 우는 백성 없게 민생이나 챙겨라. (페이스 북에서 퍼옴 편집자)

우리나라는 단군이래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 대한제국. 이름이 여러 번 바꾸어 온 나라이다. 대한제국의 황제가 칙령41호를 제정한 것을 일본보다 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임을 주장한다. 광복절은 독립을 기념하는 것이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만들면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1945년에 나라를 세웠다면 우리의 독도고유영토 설은 없다. 신용우선생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표한다. 독도사수연합회 독도 이상훈

(1면에서 계속) 일본은 여기에서 안보법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평가하면서 "(안보법은) 헌법에 합치되며 (안보법 때문에) 타국의 전쟁에 휘말릴 일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방위정책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매년 국제정세의 변화와 과거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 등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행하고 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당한 日 중학교 입시 모의고사 "독도 불법점거 국가 골라라" 출제

도쿄=김수혜 특파원 입력 : 2016.06.21 03:00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 기술, 학생들에게 틀린 사실 주입시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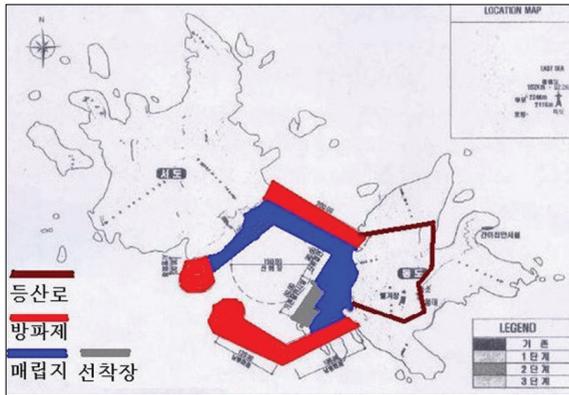


▲일본 초등학생의 중학교 입시 모의고사에 나온 독도 관련 문제. '다음 중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국가를 택하라'는 문제 아래 러시아·중국·한국·북한 등이 보기로 제시돼 있다. <연합뉴스>

일본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치르는 모의고사에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동일본 지역에 있는 한 출판사가 낸 이 문제는 사지선다형으로 '다음 중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국가를 택하라'는 내용으로 돼

있다. 보기로는 러시아·중국·북한·한국 등을 제시했다. 이 중 한국을 정답으로 고르는 문제이다. 실제로 일본 오사카(大阪) 등지 학교에서 이 시험지로 모의고사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출판사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모든 초등학교 고학년 사회와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있다"면서 "(이번에 독도 문제를 낸 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출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아베 정권이 들어선 뒤 2014년 1월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교과서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바꿨다. 이에 따라 그해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들어갔고, 이듬해에는 모든 중학교 교과서에, 올 들어서는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에 같은 내용이 실렸다. 전문가들은 정부·학교가 출제한 문제가 아니라 민간 출판사가 판매했던 모의고사이긴 하지만, 앞으로 일본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교육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분석했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은 "집요하게 독도 문제를 이슈화하는 게 일본의 기본 전략"이라며 "이런 내용을 시험 문제로 내면 일본 다음 세대 사이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기정사실인 양 굳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독도 개발 안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큰 섬이 두 개다. 두섬의 거리는 약 170m이다. 붉은 것을 방파제로 하고 회색은 선착장이다. 푸른 부분은 매립을 해서 상업지를 만들어 독도주민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서 살게 하자는 개발안이다. 지금은 독도에 체류시간이 30분이다. 4~5시간 체류를 할 수 있게 하면 독도주민들이 장사를 할 수 있다. 독도선착장을 만드신 강향희 회장의 방파제 개발안을 독도 이상훈 보강해서 색칠을 한 것이다.

1. 방파제를 만들면 파도가 있어도 접안 된다.
2. 등산로를 만들어 동도정상에 관광객이 올라갈 수 있게 하고 내려오는 길은 북쪽 방파제쪽에 별도로 만든다.
3. 독도를 어업전진기지 등으로 사용해도 좋다.
4. 서도에 10가구동도에 10가구정도 살게 한다.
5. 학교가 없으니 50~60대가 살면 된다.
6. 서도 어민숙소 까지 개방하고 나머지는 생태계 보존한다.
7. 일본은 국제재판으로 독도를 뺏으려 하니 개발하여 사람이 살면 국제 법으로 유리하다.

나라가 힘이 있고 정부가 잘 하면 국민들이 나설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 노력하자!

1900년10월25일 고종황제 독도칙령41호 제정 독도칙령116주년 "독도칙령의날" 행사를 합니다.

독도 사랑 한마당

많이 모여서 외국에 독도가 국제 법으로 우리 땅이 된 것을 알립니다. 10월25일 부산초량 정발장군동상 14시 모이자!

독도소식지 25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본회는 독도를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힘**이 모자랍니다. 사이트에 오셔서 인터넷 활동을 해 주시거나 회비를 내시거나 서명운동을 해주시는 것 힘이 됩니다. 한 가지라도 하시면 애국입니다. 일본이 뺏으려 하는 것을 알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독도를 버리는 것. 마음으로는 못 지킨다, 독도소식지는 인터넷으로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독도소식지를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다른 분께 전해 주십시오.

편집을 도와주신 황성일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ds5ean@naver.com

■ 후원하실분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안녕하세요, 나라를 못 지키면 또 다시 식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식민지 시대를 우리역사는 말 해줍니다. 징용과 위안부, 공출, 제도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우측 가입원서를 보시고 가입 해 주십시오.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독도 이상훈

| 독도사수연합회 회원가입원서 | | | |
|---|-------------------|----|----|
| http://dokdomk.com (접수번호: 독사연) | | | |
| 성명 | 생년월일 (주민번호앞자리) | 성별 | 사진 |
| 연락처 | 이메일 | | |
| | 자택전화 | | |
| | 휴대전화 | | |
| 주소 | | | |
| 본인은 독도사수연합회 회원으로 나라를 위하여 독도를 지키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가입원서를 제출합니다. | | | |
| 201년 월 일 | | | |
| 성명: (서명) | | | |
| 독도사수연합회 귀하 | | | |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로263 (괴정동) 우편번호: 49384 | | | |
| TEL: 051-466-8761, FAX: 051-206-8761, HP: 010-6504-6510, ds5ean@naver.com | | | |
|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예금주: 독도사수연합회 | | | |